

피해아동 보호제도 개선 시급

가정 내 범죄 피해아동 격리·보호에 경찰 개입 권한 적어 “피해아동 보호·수사 등 전 과정 조율할 컨트롤타워 필요”

계부와 친모에 의해 숨진 여중생이 있던 가정 내 학대 피해를 경찰에 호소했지만 제 때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를 조속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선 경찰·학계 등은 공권력이 범죄 피해아동을 적극 보호할 수 있는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아동보호·피해예방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1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7일 자신의 성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친모 유모(39)씨와 공모, 딸 A(12)양을 숨지게 하고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보복살인)로 구속된 계부 김모(31)씨를 검찰에 송지했다.

김씨가 딸에게 저지른 성범죄 혐의(통신매체 이용음란·강간미수) 관련 수사도 같은 날 검찰에 송지됐다.

A양이 숨진 뒤에야 경찰의 성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경찰이 A양 보호에 소홀한 것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A양은 지난달 9일 친부와 전남 목포경찰서를 찾아 ‘김씨가 음란 영상물을 보낸다’며 신고했다. 사흘 뒤에는 계부의 성폭행 미수 피해 사실도 알렸다.

경찰은 친부가 지난 2016년 5월 A양을 체벌하다 접근금지 가처분명령까지 받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친모의 현 남편인 김씨가 2017년 11월 A양을 때려 입건된 기록도 검토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학대를 방관한 친모, 학대 전력이 있는 친부 사이에 놓인 A양을 전문보호기관에 맡기지 않았다.

계부에 대한 처벌 요구로 미뤄 A양 친부모가 충분한 보호 의지와 능력이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했다. 보복범죄 가능성도 낮게 봤다.

이후 목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관찰지 규정에 따라 사건을 광주경찰청에 넘겼다. 이 사이 아내 유씨(A양 친모)를 통해 신고 사실을 안 김씨는 살해 의사를 드러내며 유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김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30분께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 안에서 A양을 살해했다. 딸을 보호해야 할 친모는 범행 직전 수면제 탄 음료를 A양에게 먹이는 등 오히려 범행을 도왔다.

수사를 맡았던 경찰 관계자는 “관련 수사와 A양 보호는 모두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절차상 사제 연구를 통해 수사 효율성·아동 보호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A양을 보호하지 못해 유감이다”고 해명했다.

현재 해당 수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마친 국가인권위원회는 절차 보완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피해아동 보호에 허점이 많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수사팀 소속 한 경찰 관계자는 “만 13세 미만 아동 범죄 수사는 진술 증거능력을 위해 상담·조사를 병행하고 참고인을 모두 조사하기 때문에 수개월이 걸린다”면서 “수사 기간 만큼은 정서·신변에 영향을 줄 요인과 아동이 격리돼야 한다. 인의조항으로 가능한 경찰의 강제보호 조치는 재량이 크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은 “미국은 가정 내 아동범죄가 신고되면 피해 아동 격리보호부터 진행한다. 이후 아동은 전문기관에 보호하거나, 주기적인

가정 방문조사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한다”고 말했다.

박주혜 호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초기 대응이 어렵다. 숨진 A양이 과거 친부와 계부에게 학대받았던 정황을 고려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A양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경찰도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찰과 유관기관이 가정 내 아동범죄에 개입할 권한이 크지 않다. 가정 문제에 개입하지 꺼려하는 정서가 있어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하는 경우도 있다”며 “미국의 아동보호국처럼 피해 아동 보호와 수사 전 과정을 조율할 수 있고 강력한 권한을 갖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신봉우 기자



더위 식히는 어린이들 21일 오전 울산시청 햇빛광장 분수대에서 남구 예방어린이집 원생들이 분수대 물줄기를 보면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건보 혜택만 누린 재외한국인 3년간 23만명...420억 ‘먹튀’

건강보험료 부과일을 피해 입국한 뒤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 제도를 악용한 이른바 ‘먹튀’ 한국인이 3년간 2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420여억원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해 해외거주자 10만4309명이 보험료 부담 없이 진료료 받아 190억2200만원 상당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2016년 7만392명, 2017년 5만3780명 등 3년간 22만8481명이 보험료 한 푼 내지 않고 국내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들어간 건강보험 재정만

419억9900만원에 이른다. 3년 사이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보험료 납부 의무는 다하지 않은 양해족이 3만여명 늘어난 셈이다.

이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가능한 일이다.

국외 여행 중이거나 해외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되면서 보험료도 부과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머무르다가 1일을 피해 입국해 치료를 받고 다음달 1일 전 출국(월중 입출국)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A(57·남)씨는 2016년 6월18일 입국해 6차례에 걸쳐 만성비염사

C형간염 치료 등을 받았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한 급여액은 1076만원에 넘는데 A씨가 6월26일 출국하면서 보험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정춘숙 의원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먹튀 문제 뿐 아니라 내국인의 건강보험 먹튀 문제도 상당한 규모로 추측됐지만 자료로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다”며 “공평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라도 해외 출국으로 인한 급여정지자도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해당월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인도네시아, 마약 밀수 프랑스 男 사형 선고

인도네시아 법원은 20일(현지시간) 자국에 다량의 마약을 반입한 30대 프랑스 국적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AFT통신, BBC는 인도네시아 마타람 지방법원은 2.98kg 상당의 필로폰과 엑스터시 등을 반입한 프랑스인 펠릭스 도르팡(35)의 마약 밀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도르팡은 작년 9월21일 마약을 숨긴 가방을 들고 발리 인근에 위치한 롬복섬에 입국하다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도르팡에 징역 20년형과 100억루피아(약 8억28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린 셈이다.

사건을 담당한 판사는 도르팡이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돼 있고, 밀수를 시도한 마약의 양이 상당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사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도르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마약 문제와 관련해 가장 엄격한 형을 내리는 국가 중 하나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마약을 소지했을 때 최장 20년까지 구형 가능하며, 유형이 적발됐을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BBC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인도네시아 당국은 호주, 브라질, 네덜란드, 나이지리아 등 국적을 갖고 있는 마약사범 14명을 총살했다. 2016년에는 자국민 1명과 나이지리아인 3명이 총살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2017년 이후 사형 집행을 중단했으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들이 마약 문제로 사형 선고를 받고 구금돼 있다.

도르팡은 올해 초 수감 중이던 경찰 구치소에서 탈옥했다 인근 숲에서 다시 체포된 전력이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현지 경찰관을 매수해 쇠를 구한 도르팡은 구치소 창살을 잘라내 자신의 옷과 커튼 등으로 줄을 만든 뒤 뛰어내렸다. 매수된 경찰은 현재 체포된 상태다.

리비아 트리폴리 등 수돗물 끊겨

리비아의 한 무장단체가 지난 19일 수도 트리폴리의 수돗물공급센터를 점거, 밸브를 잠가 트리폴리와 북서부 도시들에서 약 200만명이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유엔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리비아 정부는 수돗물 공급센터를 점거한 무장단체로 리비아국민군(INA) 지도자 할리파 하프타르를 지지하는 할리파 엔나이시가 이끄는 단체를 적시하면서, 수돗물 공급중단은 전쟁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7년에도 트리폴리의 수돗물 공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스페인 두자리 유엔 대변인은 유엔 인도주의 담당 관리들이 트리폴리 수돗물 공급중단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자리 대변인은 “트리폴리의 일부 구역에서는 벌써 수압이 크게 낮아지는 등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 밸브가 다시 열리지 않을 경우 최악의 영향은 이를 뒤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리폴리의 수돗물 공급은 19일의 공적 이전부터 정비기자들이 안전을 이유로 대피하면서 이미 영향을 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리비아에서는 하프타르가 이끄는 리비아국민군(INA)이 지난달 4일 트리폴리 합락을 위한 공격을 시작한 이후 INA와 유엔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 간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

리비아는 지난 2011년 전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내전으로 축출돼 살해당한 후 동서로 분열돼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트리폴리 합락을 둘러싸고 계속되고 있는 INA와 무장 민병대 간 전투로 2011년과 같은 내전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경 넘어 붙잡힌 과테말라 10대 사망

미국 국경을 넘어가 국경순찰대에 붙잡힌 과테말라 국적 청소년이 사망했다. 구급된 미성년 난민의 사망은 올해만 벌써 5명째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20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텍사스 남부 난민보호소에서 16살 소년 에르난데스 바스케스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보건 당국은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20일 아침 그가 의식이 없는 채로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소년은 지난 13일 텍사스 남부의 리오그르테 벨리를 건너던 70명의 일행과 함께 체포됐다. 국경순찰대는 소년이 지난 일주일 동안 구급된 이유에 대해 언급을 기피했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는 부모나 법적 보호자가 동반되지 않는 미성년자를 구급시 72시간 내에 청소년 호보 시설로 옮겨야 한다. 국경순찰대 측은 난민 소년을 미 보건복지부(HHS)가 운영하는 청소년 호보 시설로 배치할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태치료쪽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건강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